

베트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손정식**

- I. 서론
- II. 부실채권의 규모와 발생원인
- III.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
- IV. 결론

I. 서론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금융부문의 효율성이 중요함은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이 행경제 또는 전환경제(transitional economy)인 베트남은 자본부족 문제에 직면 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정착 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 1986년 ‘도이 모이(Doi Moi)’ 이후 베트남이 금융부문의 개혁을 시도한 것은 시의에 맞는 조치였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상황은 80년대 후반 개혁초기에 비해 괄목할 만큼 발전 했고, 시장경제의 기틀을 축실히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금융부

* 본 연구는 1997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결과의 일부임.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부문의 하부구조 구축은 실물부문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전전한 금융하부구조의 구축에 커다란 장애 요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이다.

‘도이 모이’ 이후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원이 정부재정으로부터 국영상업은행으로 이관된 이래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더욱 부실화해서 국영상업은행(state-owned commercial bank: SOCB)은 점차 많은 부실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체제를 전환하기 이전에는 국립은행이었던 베트남국립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의 금융기능 결여로 기업간 신용(trade credit) 공여가 일반적이었는데¹⁾ 이는 부실채권 처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부실채권문제의 중요성은 첫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은 신규로 설립하는 민간은행들 및 외국은행 지점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국영상업은행은 부실판매 때문에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반면 부실채권이 없는 외국은행이나 민간은행은 저금리 대출로 양질의 대출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 경쟁에서 불리하다. 둘째, 대량의 부실채권은 국영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 부실채권이 국영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율 마진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기회를 가진 우량기업은 국영상업은행을 회피하고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제공해 주는 외국금융기관을 비롯한 다른 자금 공급처를 찾는 경향이 있다.²⁾ 그러므로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금융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선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베트남 정부도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채무처리 위원회(National Debt Resolution Committee)를 설치했다.

베트남 부실채권 문제는 국내은행들이 가진 국영기업에 대한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외채문제도 있다.³⁾ 그렇지만 본 논문의 연구는 베트남의 외

1) 기업간 신용이란 예컨대 원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한 경우 납품기업과 납품 받은 기업 사이에 기업신용이 발생한 것이다. Nguyen Dinh Tai (1997), p. 10.

2) 베트남과 같은 전환경제인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이자율 마진은 1990년 5~7%이던 것이,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1992년에는 13%대로 상승하였고, 1993년에는 14%로 상승한 적도 있다.

3)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 외채 가운데 부실채무 5억5천만달러를 채권기관과 부채재조

채부실화 문제는 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영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문제로만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살펴본 다음에 부실채권의 처리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아울러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부실채권의 기준과 규모 및 발생원인을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함께 추가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부실채권의 규모와 발생원인

1. 부실대출의 규모

은행의 부실채권은 주로 부실대출로부터 발생한다. 베트남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기준 즉, (1) 원리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대출 가운데 (2) 무담보대출을 부실대출로 정의하고 있다.⁴⁾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있

정(debt restructuring) 협상을 벌린 바도 있다. 1993년에 협상이 끝난 국가 대 국가 채무인 파리를럽 채무문제도 있다. 베트남의 외채 부실화도 심각한 문제이다. 베트남 외채의 부실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의 중앙은행들 가운데는 베트남에 만기 1년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바 있다. 아울러 구 소련에 대한 20 억 루블(rouble) 채무도 있다.

- 4)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정상(normal), 요주의(pre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손실추정(estimanted loss) 등이 그것이다. 부실채권은 이중 정상과 요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무수익여신(NPL: non-performing loans)이라 고도 부른다. 정상은 말뜻 그대로 이자납입과 원금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금을 말한다. 요주의는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돈을 떼일 염려까지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 연체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고정여신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경우이고, 회수의문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된다. 손실추정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에 따

는 무담보 대출금을 부실대출로 구분한다. 그런데 때로는 중앙은행이 부실대출을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보편적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부실대출은 단순히 상환만기 일자가 일정기간 지난 대출, 이른바 연체대출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상환만기가 지난 대출이라도 대출은행이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출로 처리하지 않는 한 부실대출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영상업은행들은 현재 부실대출의 만기를 사실상 무제한 연장해 줄 수 있다. 더욱이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나타난 베트남의 부실채권 규모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에서 보면 실상에 비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2. 부실채권 현황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전제를 감안하더라도 만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연체대출규모가 대단히 큰 것만은 틀림 없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도만 하더라도 전체은행의 총자본대비 연체대출비율이 112.3%로 부실대출 규모가 자본금 규모를 상회하였다. 이는 은행전체로 거의 자본잠식이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1997년도 연체대출 비율의 비중은 전체 대출의 15.4%에 이르고 있다. 1997년도 총자본/총자산비율이 7.9%인데 비해 같은 해 연체대출/총자산비율은 8.9%로 역시 자본금 규모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대출문제는 국영상업은행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체대출비율은 총대출의 16.4%이며, 총자본대비 연체대출비율이 181.4%로 은행산업 전체의 1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비록 연체대출의 50%는 상환이 가능하다 해도 자본금의 90%는 잠식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국영상업은행의 총자본/총자산비율이 7.2%인 것에 비해 연체대출/총자산비율은 13.0%로 은행산업 전체 비율 8.9%에 비해 4.1%포인트나 높다. 아울러 연체대출/총자산비율이 총자본/총

르면 지난 1998년 6월말 현재 국내 18개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은 총여신 298조 5675억원의 8.7%인 25조 9361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산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국영상업은행의 자본금을 크게 잠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베트남 은행산업의 연체대출 추이

(단위: %)

전체은행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체은행								
연체대출/총자본(Overdue/Capital)	-	-	88.1	95.5	85.0	61.9	75.7	112.3
연체대출/총여신(Overdue/Loan)	-	-	13.7	11.1	6.0	7.8	9.3	15.4
연체대출/총자산(Overdue/Assets)	-	-	6.0	6.6	5.5	4.4	5.5	8.9
총자본/총자산(Capital/Assets)	6.8	7.4	6.8	6.9	6.9	7.1	7.2	7.9
국영상업은행(SOCB)								
연체대출/총자본(Overdue/Capital)	48.8	106.7	109.0	125.6	121.0	105.5	128.4	181.4
연체대출/총여신(Overdue/Loan)	8.6	19.7	13.7	11.6	10.0	8.9	11.0	16.4
연체대출/총자산(Overdue/Assets)	3.3	7.0	6.0	6.9	6.3	5.2	6.4	13.0
총자본/총자산(Capital/Assets)	6.8	6.6	5.5	5.5	5.0	4.9	5.0	7.2

* 자료: IFS, Klingebiel(1997), Table 3.5

<표 1>에 의하면 1993년도에 총자본대비 연체대출비율이 95.5%로 높았다가 점차 감소해서 1995년도에는 61.5% 수준으로 개선되었었다. 그런데 1996년에는 75.5%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가 1997년도에는 112.3%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은행이 더 이상 부실대출 정리를 늦추고만 있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뜻한다.

이러한 공식기록에 나타난 연체대출 상황조차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은행은 국제기준에 따른 부실채권은 5조 내지 6조동 정도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체 대출의 25%에 이르며, 자본금과 충당금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⁵⁾

또 다른 자료에 의해 부실채권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예컨대 1991년 4월 현재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국영기업의 부채 그리고 국영기업 사이의 부채는 8조

5) Jon Liden(1995), p. 16.

동이었다.⁶⁾ 그런데 당시 국영기업의 상환불능 대출은 약 1조동이었고, 1년 후 1992년 4월에는 약 2조동으로 두 배가 증가했다. 1994년 말 부실대출규모는 베트남 개발은행(BIDV) 850억동, 베트남상공은행(BICV) 3,860억동, 베트남농업은행(ABV) 8,160억동, 베트남무역은행(BFTV) 900억동으로 총 1.4조동이다. 이는 국영 상업은행 총대출금 5%를 약간 상회하며, 국영상업은행의 자본금과 충당금의 50%에 이르는 정도였다.

부실대출문제는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의 부실규모도 1991년에는 총대출의 6%였었는데 1993년에는 30%로 증가하였다.⁷⁾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의 부실대출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총대출의 50% 정도가 부실대출이며, 국영기업의 부실채무는 베트남 GDP의 15%에 달한다는 견해도 있다.⁸⁾

3. 은행의 부실채권 발생 원인

베트남 은행들의 부실대출 원인을 요약하면, 사회주의 체제 아래 ‘정부의 실패’로부터 발생한 부실자산을 유산 받은 것과 국영기업의 부실화, 그리고 은행개혁 이후에도 계속된 ‘은행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1) 중앙명령경제의 ‘정부의 실패’ 유산

베트남 국영상업은행들의 부실대출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첫째, 국영상업은행들의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 중앙명령경제 체제 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분배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다. 즉 동구권의 여타 체제전환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실패’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부문에 ‘정부의 실패’가 발생한 까닭은 은행개혁이전 중앙명령경제 체제

6) World Bank (1994), p. 12.

7) World Bank(1994), p. 19.

8) Nguyen Dinh Tai(1997), p. 22.

아래에서 은행시스템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은행체제였는데, 주된 투자 대상인 국영기업의 투자프로젝트는 행정부가 결정하였으므로 정부의 대출지시에 따라 국립은행들은 자금을 제공하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회계처리 기능에 치중했다. 따라서 위험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출심사 및 신용통제와 감독이 불가능했다.

1988년 베트남 금융개혁은 베트남국립은행(SBV)으로부터 상업은행부문을 분리해 은행산업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이원체제로 출발했다. 금융개혁을 계기로 국가소유의 새로운 상업은행으로 출범한 국영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분리 받았는데, 자산의 질(quality)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장부가격으로 자산이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금융개혁 이전 국립은행의 부실화된 많은 자산들이 새로 탄생한 국영상업은행들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⁹⁾ 결국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대부분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상업은행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투자(대출)활동 결과 발생한 부실채권과는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¹⁰⁾

(2) 국영기업의 부실화

국영기업이 자신의 예산제약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것을 ‘강한 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이라고 한다면 중앙명령경제 체제에서 국영기업들은 ‘약한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따라 행동해 왔다. 즉 수입의 범위 이내로 지출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켰다. 그러한 약한 예산제약 아래 거대한 국영기업의 설립과 자원의 가용성을 감안하지 않은 생산과 영업규모의 확대가 부실채권의 원인이 되었다.

‘도이 모이’ 이후 베트남 정부는 여러 해 동안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국영기업체 수는 12,000개로부

9) 그 당시 대출의 절반은 부실태출화 했다는 견해도 있다. Nguyen Dinh Tai(1996), p.

17.

10) John P. Bonin(1993), p. 104.

터 7,000개로 줄어들었으며, 5,000개회사 가운데 2,000개회사의 자산이 다른 국영 기업과 민간기업에 매각되었다. 매각대금은 모두 부채청산에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국영기업의 부실화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정부가 적자 국영기업을 도산시키지 않고, 이를 기업의 적자지출을 국영상업은행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 준 것은 실업 발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영기업의 자산가치는 장부가치의 61.4%에 불과하며, 국가가 배정하는 운전자금은 생산과 영업에 필요한 총자금의 20% 내지 10%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부실한 국영기업도 생산과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영상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

부실한 국영기업의 자금수요를 국영상업은행이 외면하기 어려운 까닭은 국영상업은행 자의로 부실화된 국영기업을 도산시키기도 어렵고, 도산시키면 더 많은 부실채권을 떠 안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은행은 보다 효율적인 신규대출을 제한할 수 밖에 없어 은행의 기존부실태대출이 신규대출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레스(Marrese)의 말대로 ‘스톡 문제’가 ‘플로우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¹¹⁾

(3) 금융개혁 이후의 ‘은행의 실패’

시장원리에 따르면, 금융개혁 이후 국영상업은행들은 대출기업의 부실화가 분명한 경우 그 기업에게 대출자금의 공급을 중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상업은행들은 과거에 그랬듯이 어떤 방식이던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믿고 부실 국영기업에 자금공급을 계속했다. 이토록 금융개혁 이후에도 은행이 대출 관행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은행의 실패’가 부실채권을 누적시켰다.

특히 국영상업은행은 대출한 후 사후관리(monitoring)를 부실하게 했다. 즉, 대출 이후 감시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저 담보에 만족하며, 담보가치의 변동에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영상업은행들은 국영기업을 잘 알고 있다

11) 스톡문제란 현재 존재하는 부실자산의 스톡의 문제이고, 플로우 문제란 부실자산을 발생시키는 은행의 대출행위로 새롭게 발생하는 부실자산의 문제이다.

고 확신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통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였으며, 국영기업이 제공하는 기록에만 의존하였다. 물론 대출규정을 우회하는 등 은행과 국영기업 간 담합하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은행의 건전성 대출규정을 위배한 경우가 많았다. 국영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생산과 영업활동에 관한 실사를 통해 충분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경제지식 부족으로 은행원들의 심사능력 결여도 문제였다.¹²⁾

(4) 민간기업에 대한 부실대출

은행의 부실채권이 누적된 것은 오직 국영기업 때문만은 아니고 비국영기업 즉 민간기업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전체 국가예산 세입의 9%를 점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기업들의 자본금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17,036개 민간기업 가운데 6,178개는 유한회사이며 781개는 합자회사인데 이들 전체 민간기업의 총자본금은 겨우 120억동 수준이다. 그러므로 많은 민간기업들은 자본금이 없거나 가짜 자본금으로 기업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렇듯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의 자본금이 대출자금 규모에 비해 너무 영세하다. 민간기업들은 자기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총액을 대출 받으려 했고 또 받았다. 자본금이 적다보니 기업이 은행자금을 빌리려면 원칙적으로 담보, 저당 또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담보나 보증 없이도 은행대출을 받았으며, 때로는 담보가치가 대출금에 비해 너무 적었다. 동일한 담보물을 여러 은행에 제시하고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도산하면 거래은행이 단독으로 담보물을 처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담보물을 차압했다 해도 경매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은행은 원매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1995년에 베트남 정부는 국영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총대출에서 민간

12) Tran Dai Bang(1998), p. 26.

13) Tran Dai Bang(1998), p. 25. 기업당 평균자본금 규모는 70만동이므로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면 약 70달러가 된다.

부문에 대한 중장기 대출비중을 증대하도록 독려한바 있었데 은행은 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 우선 새로운 민간 고객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노하우 등 신용분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급된 자금을 사후관리하기 위해 은행이 해야 할 과제들을 은행직원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않았다.

기업 자본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대출을 여러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 은행들은 기업을 감독하기가 어렵다. 또 대출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은행과 기업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욱 커지게 되어 기업들은 대출자금을 대출목적 이외에 사용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 경우 기업은 대출자금을 잘못 활용하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은행은 추가대출을 해주어 기업이 계속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은행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은행의 실패’가 발생한 원인은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충분한 감독 및 규제체계, 불충분한 대출분류 기준, 대손충당금제도 결여, 공개기준 결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기에 필요한 불충분한 자료, 불충분한 신용관리 시스템 그리고 취약한 은행경영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아시아 금융위기

외환위험에 대한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의 직접적 노출은 외환규제로 제한적 이지만, 은행은 간접적으로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동(dong)화 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외화대출이 국내 차입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 결과 총신용의 34%가 외화표시대출이다. 국영기업은 환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약 50%의 대출이 외화표시대출이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은행 차입자가 수출상들인 경우 환위험에 대한 헛징수단이 없으므로 은행들은 간접적으로 환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면 타이(Thai)의 바트(Bat)화가 급격히 평가절하 하면 베트남 동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어 타이에 대한 수출

14) World Bank (1997), p. 55.

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차입자들의 변제능력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은행시스템이 환위험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은 차입자들에게 헛징수단이 없고 외화표시대출을 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

1. 이론적 배경

베트남의 국영상업은행들은 대출만기를 계속 연장함으로써 부실태대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모든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은 정부가 지시 또는 보증한 것이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예산에서 대리 지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의 보증이란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며 국가재산인 국영기업을 국영상업은행이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을 영구히 지속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부실채권이 누적되면 점차 많은 대손충당금을 계속 쌓아 두어야 하며, 그로 인해 신규대출 자금이 상대적으로 고갈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출자전환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아예 장부로부터 삭제하는 부채탕감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 부채청산 명령

일정기간까지 모든 은행의 연체대출을 청산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하는 등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연체대출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부실규모가 크지 않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부실채권을 청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연체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인출할 것이므로 은행들도 은행의 모든 부

채(예금)를 청산해야 할텐데, 그 과정에서 여타 고객에 대한 예금원리금을 내 줄 유동성(현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예금은행과 대출은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기업의 운전자금을 고갈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효율적인 기업들까지도 금융상의 애로에 직면할 수 있다. 연체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2) 부실채권의 출자전환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실판매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부실채권의 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즉 부실채권을 차입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의 개입 없이 은행과 기업간의 자율적 해결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원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더욱이 은행은 주주로써 부실기업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도 있고 기업이 소생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문제는 너무 많은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은행은 더 많은 자본금을 스스로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경영과 기업경영이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파견된 은행경영진이 기업경영을 기업가보다 잘 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베트남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영기업들을 민영화 또는 주식화(equitization)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영기업들은 주식회사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주식화된 국영기업의 경우에도 국영기업이 원하지 않는 경우 부실판매에 갈음하여 국영상업은행이 국영기업의 주식을 강제로 차압해서 보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3) 청산은행 설립

정부가 은행의 부실자산을 떠 안을 청산은행(bad bank)을 설립해서 부실자

산을 장부로부터 털어 내게 해서 건전은행(clean bank)을 만든다. 이 때 부실채권의 시세를 얼마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기존 은행들의 손실규모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 금융위기 때 퇴출은행이 가지고 있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장부가격의 45%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정부가 성업공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충당했다. 은행의 부실자산을 넘겨받은 청산은행은 이를 국내외 금융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청산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방법은 첫째는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청산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둘째는 청산은행이 발행한 정부채권을 은행의 부실채권과 교환해 줄 수 있는데, 이 때 청산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이 두 방법은 모두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구입(carve-out)해주는 이른바 국채화 방안이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국영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정부(또는 정부기관)의 채무로 전환된다.¹⁵⁾ 물론 기준일 이후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이 책임을 지게 한다. 이 방식에 따라 은행은 부실채권이 없어지고, 새로이 보유하게 된 정부채권을 가지고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의 청산능력(solvency)은 회복된다.

베트남에서는 이 방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재정이 빈약한 베트남에서 부실채권을 구매하기 위한 공적자금을 마련할 때 예산제약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유재산권 개념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담보물에 대한 법적 장치도 미비해서 청산은행이 건전은행(clean bank)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실대출 관련 담보물을 시장에서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부실채권 자체를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

15)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이른바 자산스왑(asset swap)이란 방법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부실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전환경제에는 그러한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때로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신규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based securities)을 발행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도 있다. 신용금고회사들이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장부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값으로 발행했다.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게 장부 가의 45%에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했다.

(4) 국영상업은행과 국영기업의 증자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전환경체제 국가들, 특히 동구권국가들은 정부 책임 아래 은행증자(recapitalization)를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은행증자는 부실자산 누적으로 은행자본이 고갈된 상태의 은행에 자본을 증액시켜 줌으로써 은행을 지급불능위험이나 청산불능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은행증자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구제금융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증자에 참여해서 대주주가 된 것도 이 방식이다.

전환경체에서는 은행부실대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영기업을 민영화(privatization)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주식화(equitization)하는 방안으로 국영기업의 자본금을 증대시켜 은행부채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주식화는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보호 아래 부실대출을 양산시키고 있는 국영상업은행의 주식화도 함께 시도해야 한다.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은행이 국가의 통제 안에 있는 한 비효율적 신용배분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국영기업간 내부신용과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부실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척시킬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¹⁶⁾

주식화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민영화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정함으로써 민영화 이후 효율적 경영을 추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부여할 수 있고, 정부의 공격자금이나 직접 개입 없이 부실채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장기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더욱이 민영화 기간동안 부실채권은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주식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에서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은행의 주식을 어떻게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내국인들은 국영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자금이 없고, 외국인에게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상업은행을 매각하지 말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다.

16) Nguyen Dinh Tai(1996), p. 17.

(5) 부채탕감

국영기업의 부실채권을 은행이 모두 대손상각으로 처리 즉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부채를 은행 장부에서 삭제하는 방식인데, 국영기업의 모든 기존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과 국영기업의 부실채무만을 청산하는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의 논리적 근거는 부채탕감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모든 기존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구조조정을 자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부실채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채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속 가동해야 하므로 은행은 신규자금을 부실기업에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채무를 모두 탕감해 줄 경우 그럴 필요가 없어져 은행자금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존채무를 탕감 받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할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도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실채권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연명해왔던 기업들은 더 이상 생존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들은 그러한 부실예상 기업에는 추가자금을 공급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정리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실채권이 많은 국영기업이 그렇지 않은 국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동구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했던 방법인데, 오직 부실채권만을 청산, 즉 장부에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같은 정리방식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실채권이 많은 국영기업이 그렇지 않은 국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새롭게 설립된 국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부실채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주는 이 방법은 관련된 기업과 은행들을 새 출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앞으로도 부실채권이 발생할 때 정부가 부채탕감을 통해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 은행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부구제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도의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설사 이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부실채권의 상

계처리는 한 번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은행산업의 시스템을 재구축할(restructuring) 필요가 있다.

2. 베트남의 부실채권 정리방안

부실채권의 정리는 국영상업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부실대출을 국영상업은행의 만기 자동연장과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대출)으로 그럭저럭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현재 베트남 은행의 수익성 악화 추이를 감안할 때 이러한 미온적 구제조치는 조만간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의 부실대출을 정리하는 방안을 찾는데는 한계가 많다. 우선 주식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은행의 주식발행을 통한 증자방식도 활용할 수 없으며, 국영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부채의 출자전환방식도 곤란하다. 본고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중앙명령경제에서의 부실채권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체제 별 부실채권 정리의 의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성은 ‘선택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독립된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기책임 아래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이득과 손실(비용)을 해당 개별 경제주체들이 향유한다. 그래서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부실을 발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지우는 것도 그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실부담은 경제주체 자신의 소유재산을 포기하거나 가치감축을 통해 이뤄진다. 선택의 자유와 자기책임원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여야 하며, 또한 제도적으로 의사결정 결과 이득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향유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있는 사유재산권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중앙명령경제에서 베트남 경제의 특성은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경제주체가 전체 인민 또는 인민을 대리한 정부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전체 인민을 대리하여 중앙정부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이득과 비용도 국가 즉 전체 인민이 공유한다. 중앙명령경제에서도 비록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부의 예산계획을 수행 또는 집행하는 것뿐이므로 독립적 의사결정 주체는 아니며, 따라서 이해득실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러므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기본전제 역시 이해당사자가 독립된 경제주체이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확정짓는 사유재산권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베트남 정부 내에서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은행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것은 정부라는 단일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결과로 보아야지 독립된 두 기관의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진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영기업에 대한 국영상업은행 대출도 전 인민을 대리한 국가로부터 소임을 받은 국영기업과 역시 전 인민의 출자로 설립한 국영상업은행 사이의 거래이다. 궁극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결국 인민 또는 인민을 대리한 중앙정부이다. 그러므로 성공적 대출로 국영기업의 생산증가에 따라 이득이 발생할 때 그것을 향유하는 것도 인민이고, 만약 그 대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역시 인민이 부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경제가 중앙명령경제 체제 아래 발생했던 과거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전 인민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한 국가의 책임이며, 이해득실에 참여한 전 인민 즉 국가의 책임 하에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앙명령경제 아래 국영기업에 제공된 국립은행 대출금은 배정된 국가예산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중앙정부는 특정 국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국가예산 즉 재정투융자 자금을 배정하거나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자금을 제공하게 해서 마련할 수도 있다. 재정자금은 원리금 부담이 없는 자금이며 금융자금은 원리금부담이 있는 자금이라는 차이뿐인데, 국영기업이 국영상업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해서 국영상업은행에 이득이 발생하면 그것 역시 국고에 귀속되어 재정자금의 원천이 되므로 두 자금 사이에 실질적 차이는 없다. 즉 중앙명

령경제에서는 금융자금과 재정자금은 비록 기술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다.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은 단순히 회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이며,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의사결정에 따른 혜택을 보거나 책임을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않다.

국영기업도 정부의 예산계획에 따라 재정자금이나 국책은행의 금융자금을 가지고 정부가 사전에 정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영기업이 자기책임원칙 아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금을 조달해서 시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해도 국영기업 임직원들이 이를 향유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그 비용을 부담할 입장에 서있지 않다.

(2) 베트남의 부실채권 정리방안: 부채탕감

베트남에서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국영기업의 부채는 동일한 경제주체인 정부 부처별 내부거래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 가정 내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간의 채권 채무관계, 또는 한 회사 내에서 각기 다른 부서 사이의 대차거래와 유사하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부실대출 관련 이해관계 경제주체 사이의 재산권 이전을 통해 부실대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렇지만 중앙명령경제에서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은행은 모두 국가기관이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 및 금전적 재산도 국가재산일뿐 개별 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독립된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산권 이전을 통해 부실대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독립된 의사결정권이 없는 가족들 사이나 동일 회사 내부 부서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최선의 방안은 상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중앙명령경제에서 정부 기관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 역시 상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에 제공했던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부채탕감(write-off approach)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영기업의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도 국영상업은행의

국영기업에 대한 예금채무와 상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것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판출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은행 개입은 통화량 증발을, 그리고 정부개입은 예산적자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부실판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므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민간자금을 이용해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베트남에서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부실판출을 탕감해 주면, 그 만큼 국영상업은행의 자본금이 잠식된다. 부실이 심각한 국영상업은행의 자본금은 완전히 잠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예금고객들은 지급불능 사태를 우려해서 예금인출 러시가 발생해 은행들이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베트남에서는 정부가 은행의 예금원리금의 지급보장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은행의 영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실채권의 정리는 은행의 주식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부실판출 방지대책

설사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부실판출을 완전히 탕감한다고 해도 부실을 초래한 원인인 국영기업의 부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실채권 문제는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정리 문제는 민영화 등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시도해야 할 것이다.¹⁷⁾

(1) 사유재산권제도의 확립

설사 국영상업은행과 국영기업간에 채권 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국영기업의

17) OECF (1997), p. 15.

재산을 국영상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해도 국가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만약 정부가 해당금액 만큼 국영상업은행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영기업에게 보조한다면 결국 상계하기 이전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는 재산이 국영기업이나 국영상업은행 어느 양자에게 귀속되어 있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사유재산권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경제에서는 두 국영기관 사이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제도가 정착되어서 독립된 경제주체의 재산권 조정을 통해 부실을 발생시킨 경제주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채탕감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전에 사유재산권제도를 확충하거나, 부채탕감 이후라도 추가적인 부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재산권의 이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건물을 지을 땅에 대해 토지의 사용권을 이전하고 抵當(mortgage)할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기를 은행이 꺼린다. 담보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민회의가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승인해야 하므로 인민회의가 일종의 비토권을 가진 셈이어서 담보물의 법적 강제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법령도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개인소유권을 기업소유권 보다 우선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에 저당등록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저당권 설정이나 분규를 해결할 강제적 법적 장치가 분명하지 않으며 破産法도 없다. 그러므로 담보에 대한 법규, 재산권 등록 및 부동산 가치의 평가, 强制差押, 청산, 경매 등 은행이 부실대출에 대한 담보권을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은행의 민영화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안으로 주식화(equitization) 방안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식화는 국영기업의 자본금을 증대시켜 은행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국영상업은행도 국영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로써 국영기업 경영에 참여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아울러 국영기업의 주식화는 기업에 따라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국내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한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의 주식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국영상업은행의 민영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Bonin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은행민영화 경험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은행민영화 이전에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은행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은행 경영의 지배권도 동시에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영화를 연기하거나 외국은행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와 동시에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⁸⁾ 1980년대 초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민영화 경험도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는 역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지배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¹⁹⁾

(3) 금융시스템 개혁

부채탕감 이후 추가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통제되고 보다 자율화되며 다양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국영상업은행은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국영상업은행 행장과 부행장은 중앙은행총재의 추천을 받아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체제이다. 현재 비공인 보고에 의하면 중요한 국영기

18) Bonin (1993), p. 105.

19) Oh, Junggun (1998), p. 20.

업에 대한 지원하도록 은행경영진에게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²⁰⁾

(4) 위험관리 능력 제고

① 사전관리

현재 국영상업은행과 비국영상업은행 대부분 담보대출을 할뿐 시장경제에서 상업은행들이 대출심사할 때 고려하는 차입기업의 수익성 전망, 현금흐름, 기존 채무규모, 자본금, 지급변제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²¹⁾ 더구나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도 아니고 주로 신용대출이다. 담보, 저당 또는 보증이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와 저당자산을 처분해서 회수하는 것은 이상적인 대안은 아니며 불가피한 방안일 뿐이다. 또한 현재 그러한 자산을 은행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듯 담보자산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은 대출심사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대출을 신청할 때 재무보고서, 재무상태 분석, 차입목적, 변제능력,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장경제에서도 은행이 대출기업의 청 산능력(solvency)을 담보, 저당자산이나 보증 능력과 일치시켰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출기업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은행들도 기업의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 자체의 재무능력에 근거한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100% 은행대출로 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신용은 기업의 투자자금 필요를 보충 보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기업의 자금활용 용도와 변제능력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해당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대출프로젝트의 효율성이나 전망, 수익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20) Jon Liden(1995), p. 16.

21) World Bank(1993), p. 54.

특히 민간기업은 수도 많고 기업의 크기도 다양하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기업의 자금신청과는 별도로 개별기업의 생산과 영업에 진정으로 필요한 자금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와 발전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특히 기업의 위장된 자본금을 은행은 심사과정에서 발견해 제거해서 그러한 기업이 발불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대출관련 서류부터 표준화하고, 대출관련 신용관리 담당자는 주기적 교육연수를 통해 해당 대출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② 사후관리

국영상업은행은 기업에 대한 감시(monitoring)제도를 정착시켜야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체계에는 주주에 의한 감시를 뜻하는 외부(outsider)감시와 은행경영진이 기업의 이사로 파견되어 기업경영에 직접 간여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insider)감시제도가 있다. 물론 내부감시제도는 단점도 있다. 은행이 여러 기업에 이사를 파견할 경우 기업간 담합을 유도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들이 파견한 기업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경쟁기업에게 대출자금을 공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²²⁾

은행의 부실행대출문제는 궁극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을 고려한 자본금 규모를 파악하고, 표준화된 대출등급화 시스템을 갖추며, 적정 자본금과 충당금을 정의할 국제적 회계기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IV. 결론

베트남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정착하고 경제발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 가운데서도 금융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긴요한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국영상업은행의 부실

22) Nguyen Dinh Tai(1977), p. 25.

채권 처리문제이다.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총대출의 25%로부터 50%에 이른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영상업은행들이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을 이기지 못해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이 독립된 경제주체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인 것과는 달리, 중앙명령경제에서 발생한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동일한 경제주체 안에서 내부거래 결과로 발생한 상호 채권/채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국영상업은행의 국영기업에 대한 부실채권문제는 부채탕감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채탕감 이후 추가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재산권제도의 확립과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은행의 민영화, 금융시스템 개혁, 위험관리 능력의 제고 등 금융산업의 하부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손정식, “베트남 경제개혁: 유인시스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제19권 제2호, 1998. 11, pp. 73-96.
- 손정식, “Banking Reforms in Vietnam,” 동남아학회, 『동남아연구』 제6호, 1998. 1, pp. 247-266.
- 손정식, “베트남의 금융개혁과 은행경영의 과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제18권 2호, 1997. 11, pp. 35-53.
- Bonin, John P., "On the way to Privatizing Commercial Banks: Poland and Hungary Take Different Road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35, No 4, Winter 1993.
- Borish, Michael S., Millard F. Long, and Michel Noel, "Banking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Finance & Development*, September 1995, pp. 19-25.
- Klingebiel, Daniela, "Achieving Bank Soundness, Why it Matters," unpublished manuscript, 1997.
- Liden, Jon, "The Long Anticipation of Rich Rewards," *Asiamoney*, June, 1995, pp. 16-19.
- Nguyen Dinh Tai, "Reform of and Option for a Financial System," *Vietnam Economic Review*, No. 2(32) 1996, pp. 17-25
- Nguyen Dinh Tai, "The Essential Issues in Reforming the Financial System for a Transitional Market," Seminar for Reform of Financial Markets for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hosted by EDAP-CIEM, April 22-25, 1997, Hanoi, Vietnam.
- OECF, *Financial Reform in Vietnam*, Research Paper No. 9, 1997.
- Oh, Junggun, "Performance and Issues of Bank Privatization in Kore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Bank Privatization organized by the World Bank and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November 19-20, 1998.
- Tran Dai Bang, "Overdue Debts of Commercial Banks," *Economic Review*, June 1998, pp. 24-26.
- World Bank, *Vietnam: Deepening Reform for Growth*, October 31, 1997.
- World Bank, *Vietnam: Transition to the Market*, September 1993.

Restructuring of the Bad Debts in the Vietnamese Financial Institutions

Son Jung-shik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ector is imperative for facilitating functioning of the market economic system. It is more so in the transi economies such as Vietnam. The financial reform of 1988 in Vietnam w timely turning point for establishing the financial system required in market system.

Even though a great deal of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soft' infrastructure of the financial system by the Vietnamese Governm still there is a long road to go. One of the tasks the government autho should address is the bad debts both partly inherited from the com economic system and partly creat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fter *Moi'*.

This paper deals mostly with the bad debts in the state-ow commercial banks of which the bad debt ratio ranges from 25% to depending on how one defines bad debt.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a big roadblock to develop an operational and productive banking syste Vietnam.

Those bad debts inherited from the command economic system shou viewed from the ones of the commercial banks in the modern ma

economic system in the capitalist countries. Loans in the capitalist countries are the outcome of the two independent decision-making entities. Therefore, the independent economic entit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utcome of the loans. However, the bad debts inherited from the command economy in Vietnam were the outcome of the government decision makings, mostly government budget plan. Even though the loans had been nominally made between the state-owned central bank and state-owned enterprises, both institutions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incurring of the bad debts, because the loans were made, not by their own independent decision-makings, but by the order of the government. Moreover, under the command economic system, the government is a lone economic entity which could make an independent decision making, and therefore c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outcome of its decision makings.

In the market system, transferring the private property is the final means to make an economic body being held responsible for the wrong decisions. However, in the command economic system, all of the properties, regardless whether it is held either by state-owned banks or state-owned enterprises, were owned by the government. So even though one held by a government body, say state-owned enterprises, responsible for the bad debts is transferred to another body such as the state-owned banks, transferring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belong to the state enterprises to the state-owned banks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and does not have any meanings. It is moving one property of the government from one pocket to another pocket. Therefore, it is advisable that the bad debts of the state-owned commercial banks are best to be written off from the books.

Moreover, many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further incurring

bad debts. One most immediate one is to establish the private property rights so that one economic body can be truly held responsible for decision made by being able to forfeit its owned property. Privatizing the state-owned commercial banks should be sought, in addition to the expanding their risk management an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ies. Also the legal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the transferring the ownership between economic entities.

<Key Words>

Vietnam, Restructuring, Bad Debts, State-owned Commercial Banks